노회찬·채동욱 '황교안 청문회' 나온다

여야, 인사청문회 8~10일 개최 합의

삼성X파일·국정원 댓글 사건 검증키로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10일 사흘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

황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 발언을 한다.

청문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도 이날 의결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 증인 5명, 참고인 17명 등 총 22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증인 5명은 여당요구 1명과 야당요구 4명으로 노회찬 전 의원,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홍훈 전 대법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의사 손광수씨다.

참고인 17명은 여당요구 7명, 야당요구 10명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밀고 나갔던 채 전 총장은 황 후보자와 마찰을 빚다 혼외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야당이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회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정기일인 12일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우 의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제5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변호사 시절 19건의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부산고검장 퇴임 후에 부산지검 사건 6건 이상을 수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후 법무법인에서 5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1억1천여만원을 받았다며 축하금 또는 보험금으로 보인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정상적은 급여 및 상여금"이라면서 1억여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시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출근하는 총리 후보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FTA 정식 서명 … GDP 12조달러 시장 열려

국회 비준 등 발효 절차만 남아

패션·화장품·가전 수혜 기대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정식 서명돼 수교 23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며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윤 장관과 가오 부장은 이날 FTA 서명식을 계기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추경 심의' 임시회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와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가 각각 3일과 1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광주시의회는 3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까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5329억원(13.9%) 증가한 4조3814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중 임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과 전진숙·반재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와 예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1일 임시회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과 함께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 안전·환경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FTA 대책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결의안, 배 이상저온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는 5·24조치 해제해 남북협력 나서야"

전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전남도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전남도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로 모색 차원과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5년째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2010년 5·24 조치를 전격 해제해 대화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정부는 민간이 6월 15일과 8월 15일에 추진 중인 민족공동 행사 성사를 위한 대화 분위기기를 조성하고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응원단의 공식 초청 등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남도의 땅끝 협력을 비롯한 지자체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란 및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적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 보완책 마련"

백승주 국방부 차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1일 최근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송된 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등 유관부처들과 협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한 탄저균 관련 보고에서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사전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돼 우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장병 안전에는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우리 입장을 (미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미국 국방부 장관도 사과하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위 소속 문재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를 보면서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차제에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말끔히 씻는 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명명백백히 국민에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8조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가동,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조사에는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소파 규정 개정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